

전주시의회, 2조 2743억원 내년 예산안 의결

강동화 의장 “내년에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주시의회가 16일 제3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일반회계 2조 545억원, 특별회계 2197억원 등 모두 2조 274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2조 371억원에 비해 237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심사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전진한 노동단체 육성’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1006만원, 신석정문학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동학농민혁명사 번역서 발간 8000만원, 다화용기 제작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72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전주시의회가 16일 제3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67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80억원 중 14억원 등은 일부 삭감 처리됐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인 상위법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원칙에 근거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또 시장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33건의 시장질문과 11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완주 통합은 선택 아니라 필수”

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 1광역시-1도 광역경제권 형성 필요성 제기

최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사이에서 전주와 완주 통합 공약 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전주는 거의 10년째 인구가 제자리이고,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를 추월했던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광역시 없는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는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16일 전주시의회 김호성(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은 제38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광역시-1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국가 예산 등에서 혜택 받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주와 완주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됐지만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과 진해, 창원시는 통합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통합 청주시는 87만5000명, 면적은 서울시의 1.6배로 커졌고, 예산도 올해 기준 시 단위 중 전국에서 4번째로 향상됐다. 통합 창원시도 인구 108만, 5개구로 이뤄져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김윤상 기자

김 의원은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광역시 1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최소한 전주·전남에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를 갖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의 생존과 공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의 자리 욕심이 또다시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6323억원 투입

국토부 공모서 ‘경제기반형’ 부문 선정... 종합경기장·전북대 일원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신경계거점으로 육성

과거 전주의 핵심 상권이었으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2027년까지 6300여억원이 투입돼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과 창업지원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덕진권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돼 국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은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내년 2027년까지 6년간 종합경기장과 전북대를 중심으로 약 50만㎡ 부지에 국비 250억 원, 지방비 281억 원, HUG기금 25억 원, 공기업 232억 원, 부처협업사업 925억 원, 지자체사업 535억 원, 민간투자사업 4075억 원 등 총 6323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종합경기장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주시 전통문화 메타버

스 사업화 실증단지(S-Town) 조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I-Town) 구축 △골목길·광장 정비 등 저탄소 문화특화거리 조성 △창업자·청년·신혼부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 주택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주변을 지역 문화자원과 메타버스(metaverse)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신경계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

리되면 총 266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8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루는 등 잠재된 덕진권역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 유일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종합경기장 등 덕진 권역이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형컨텐츠 체험전시장, 로파크, 정원의 숲 등과 함께 덕진권역을 전주시 발전의 심장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 1만2000여명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감면은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5000여 만 원의 요금을 감면돼 장애인 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황실장으로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려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

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해 자체인력 및 교체공사 시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기온 급강하(영하 7℃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에 동파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세대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예방 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종교문화시설 활용 관광 외연 확장 필요”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전주는 3대 종단 문화유산 갖춘 최초 사례”

종교문화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으로 3개 종단의 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런 종단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한 증장기적 계획으로 전주 관광의 새로운 축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는 수많은 관광 자원이 나열돼 있을 뿐, 관광거점도시로서 본격적 움직임과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면서 종교문화시설을 활용한 관광 외연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관광 자원은 지난 10월 세계평화의전당 개관을 기점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그는 “해당 종교문화시설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간 대규모 사

각 지자체가 종교 관광과 관련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남숙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군위군, 경기 용인시 등에서는 종교 성지를 연계한 테마상품을 개발하고, 충남 당진시는 한국의 산티아고를 자칭하며 순례길 어플을 개발해 출시하기도 했다”며 종교 관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는 종교적 색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완산봉과 서화예술마을, 완산철봉 등 관광자원과 한옥마을, 전통시장 등 지나는 코스를 설계한 외연 확장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